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The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KOBETA

| 제172호 | 2013년 8월 7일 수요일

완고한 미래부, 흔들리는 방통위

주파수 전쟁에 얽힌 양측의 두뇌게임 시작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기술이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방송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세계를 호령하는 대한민국 방송기술 패러다임이 정부부처의 어이없는 상황판단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분위기다. 동시에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방송과 통신도 각자의 진영을 추스르며 폭풍전야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건곤일척의 (대리)전투에 임하는 정부부처는 미묘한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7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하반기 주요사업 브리핑을 통해 “700MHz 대역 주파수 용도를 올해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공동 연구반을 가동해 이르면 8월 초 공동 연구반 키포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양 부처는 막바지 실무협의를 마무리 했으며 관련 전문가의 섭외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의 회동은 8월 20일 전후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래부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확보 가능한 700MHz 대역 주파수는 공공의 이익을 담보로 하는 난시청 해소와 더불어 UHD-TV 발전 등 뉴미디어 발전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무게중심이 쏠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무조건적인 주파수 통신 할당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통신 발전을 위한 주파수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납발하며 주파수를 낭비하고 현존하는 가용 주파수를 모조리 확보하려는 통신사의 이윤 추구에 정부까지 나서 부화뇌동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묘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큰 틀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지만, 미래부와 달리 강력한 의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경재 위원장의 행보에서도 엿보인다. 최근 이 위원장은 미국 방문에 올라 “국내 UHD-TV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7월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물론 이 위원장의 발언에는 ‘미래부가 확끈한 먹거리를 가져온다면’이라는 사족이 붙은데다 ‘주파수를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미래부-방통위의 주파수 공동 연구반 구성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언론보도가 한창일 때 등장한 부분은 묘하다.

사실 불과 몇 일 전만해도 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는 700MHz대역 주파수를 공익적으로, 방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되면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강조하는 미래부와 의견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외부분석이 설득력을 얻은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도 방통위의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되어 있다. 이 위원장 스스로도 7월 23일 간담회에서 “과거 700MHz 108MHz폭 중 40MHz를 통신용으로 쓰도록 하라고 의견이 나왔다”는 발언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해당 주파수의 ‘알박기’를 일종의 ‘의견’으로 치부한다는 낙담을 풍기기에 충분한 언급이었다. 그랬던 이 위원장이 갑자기 돌변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미래부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입각한 700MHz 대역 주파수 통신 할당을 강하게 천명하는 반면, 방통위는 해당 주파수를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끌고가면서 ‘시청자 편익’ 측면에서 약간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4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분석

주파수 정책 오판은 결국 국민의 부담

700MHz 무선 마이크 대란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700MHz 대역 주파수와 모바일 광개토 플랜, 이어지는 해당 주파수용 무선 마이크 불가론과 치명적인 오판, 그리고 재산권 침해. 얼핏 보기에는 서로 관계없는 인과관계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막에 숨겨진 복잡하고 다면적인 진실을 파고들면 의외로 해당 사항들이 얽여하고 순도높게 얽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2012년 1월 20일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시중 당시 위원장의 결정으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의결해 700MHz 대역 상하위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하기로 확정했다. 뉴미디어 발전 및 난시청 해소에 해당 주파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의 의견을 무시한 전격적인 판단이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당시 구 방통위의 판단은 치명적인 후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당시 방통위는 700MHz 대역 주파수 698MHz~806MHz 중 698~728MHz와 758~783MHz를 ‘미정’으로 설정하고 하위대역 728~748MHz와 상위대역 783~803MHz를 ‘통신’으로 각각 알박기했다. 그리고 보호대역으로 총 13MHz를 설정했는데, 하위 통신대역의 직후인 748~758MHz(10MHz)와 상위 통신대역 직후인 803~806MHz(3MHz)가 그 대상이다. 쉽게 말하자면 700MHz 대역 주파수 698~806MHz를 길게 펼친다고 가정했을 때 순서는 미정(30MHz)-통신(20MHz)-보호대역(10MHz)-미정(25MHz)-통신(20MHz)-보호대역(3MHz)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상위 통신대역의 740~752MHz의 12MHz는 현재 무선 마이크 사용 유예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해당 주파수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 정책으로 무선 마이크 대역이 900MHz 대역 등 다양한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방통위는 2013년 10월, 전파법에 의거 전국 3권역 채널재배치가 완전히 종료되는 달부터 해당 주파수를 활용하는 무선 마이크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정부의 뜻대로 무선 주파수가 900MHz를 비롯한 다른 대역으로 제대로 옮겨간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마지막 계도기간인 2013년 10월까지 무선 마이크를 변경해야 한다는 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도 복병으로 숨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권 침해는 헌법적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다. 전국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종료 당시에 제기되었던 국민의 재산권 침해 시비가 이번 무선 마이크 주파수 대역 이동으로 또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면허 대상인 무선 마이크의 완벽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에서 이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10만에 달하는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학원, 교회 등 영세 사업자의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율적 보상 판매에 따라 기존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이용자들이 9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가격에서 10~65% 할인해 주는 방안으로 현재 총 24개 업체가 보상 판매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는 무수히 많은 무선 마이크를 활용하는 방송사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무선 마이크 주파수 대역이 900MHz로 이동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 바로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용 할당을 위한 사전포석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불합리함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주파수 혼간섭 문제부터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의 퇴보와 더불어 더욱 치명적인 통신용 주파수 몰아주기의 패배가 그것이다. 여기에 무선 마이크가 향후 주로 활용할 900MHz 대역 주파수의 문제도 있다.(3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Photo News



‘700MHz 대역 주파수를 시청자에게’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공동 연구반 가동 소식과 함께 떠오르는 단상, 2011년 겨울을 추억하며, 오직 시청자를 위해
최진홍 rgdsz@kobeta.com



정부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언론사찰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지상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언어도단’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3.20 사이버 테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언론사인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려는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명백한 언론사찰이며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미래부의 논리는 하점투성이

만약 미래부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점검을 목적으로 방송장악을 위한 사찰을 감행한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무참히 짓밟힐 것이 뻔하다. 방송사의 정보 시스템 전반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나 기업의 비공개 정보, 내부 고발자 정보, 취재계획 등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법적인 근거도 없다. 해당 법 제2조(정의)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보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고 규정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제7조의 예외 사항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명백한 이중규제다.

지상파 방송사는 안전하다

미래부는 거듭되는 사이버 테러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기준이 방송중계시설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언론사찰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방송중계시설은 뉴스보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의 전송경로이기 때문이다. 게

다가 미래부는 사이버 테러에 따른 방송 송출 중단 가능성을 들먹이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도 말이 안 된다. 방송사 내부 방송시설망은 완벽하게 폐쇄망으로 구축되어 있고,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지난 3월 20일 방송사 사이버테러 때도 방송 송출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상파 방송사는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제작 및 송출시스템인 내부망과 직원 사무용 외부망을 분리 및 구축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셈인가

‘안전한 지상파’를 지향한다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통해 언론사찰에 나서기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법이 올바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사이버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내부정보에 멋대로 접근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미래부는 당장이라도 사이버 보안에 있어 실효성이 낮은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철회하고 지정조사반 투입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명백한 언론사찰이며, 미래부는 모든 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



사설

밀운불우(密雲不雨)에 빠진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

구름은 많으나 비는 내리지 않는다

밀운불우(密雲不雨)라는 말이 있다. 주역 소과괘(小過卦)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하늘에 구름만 뽐뽐하고 비가 되어 내리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를 더 깊게 파고들면 '모든 여건은 갖춰졌지만 일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의 처지를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주파수 할당이 시작된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을 발족해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연구진도 대부분 구성되었으며 앞으로의 일정도 비교적 상세하게 모습을 드러낸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공동 연구반이 긍정적이고 대승적인 결론을 내릴지는 의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현재 입장이 워낙 극명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오는 12월 모바일 공개토 플랜 2.0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히며 700MHz 대역 주파수 통신 할당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방통위는 방송용 주파수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나

하지만 방통위의 입장은 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부의 UHDTV 발전 계획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용 활용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즉 방통위는 미래부와 의 대립각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보존하는 방법을 택하지만, 실질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날 여지도 남겨두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가장 큰 패배자는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을 추구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활용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미래부와 콘텐츠 생산을 이유로 UHDTV 국내 도입을 시기상조라고 단정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활용 여지를 남긴 방통위 사이에서 대한민국 의 지상파 방송은 표류하고 있다. 양 부처의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양보의 불모'로 남겨진 영역이 바로 지상파 방송사가 추구하는 미디어 플랫폼이다. 양 부처는 지상파 방송사가 열심히 준비한 노력의 결과에 찬물을 붓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 피해도 이런 피해가 없다. 보편의 공공 서비스를 추구하며 방송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던 이들이 정부부처의 애면 다름에서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결론만 남았다

1차 지상파 UHDTV 실험방송에 이은 성공적인 2차 실험방송의 연속, 그리고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 계획, 지상파 방송사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호령할 준비가 끝났다.

하지만 지금 지상파 방송사는 정부가 조성한 '밀운불우(密雲不雨)'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여기에 누구의 책임이 있겠는가.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에 편향된 주파수 정책을 뒤돌아 보고 국민을 위한 주파수 정책 수립에 힘써야 한다.

미래부, 8VSB 허용 속도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의 8VSB 허용안에 강력한 동력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다. 지난달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해 케이블 SO 및 IPTV, 위성방송 사업자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미래부는 8월 5일 2차 회의를 열고 8VSB 허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담금질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케이블TV협회도 중소 PP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현재 미래부는 시청자 편익에 방점을 찍은 유료방송 8VSB 허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 편익'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으로 지상파 MMS 및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정하려는 것처럼, 미래부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당 사항을 결정하려 한다는 반박이 거세기 때문이다. 즉, 미래부가 다분히 특정 사업자의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아이템을 자의로 정해 놓고 '국민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게다가 미디어 사안에 접근할 때 무조건 시청자 편익의 측면에서만 따진다면 균형잡힌 관련 산업 발전은 요원하다는 논리도 있다. 시청자는 당연히 다양한 미디어 산업 서비스를 원한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이러한 시청자의 편익만 따라가게 된다면, 미디어 산업의 중심은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단단한 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하고 단지 시청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유료방송 특혜를 남발한다면 미디어 포폴리즘이 따로 없다는 견해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이경재 위원장, “재전송 규제 만들 것”

미국을 방문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현지시간 7월 25일 로스앤젤레스 버뱅크에 있는 월트디즈니 본사를 방문해 벤자민 파인 글로벌 마케팅부문 사장과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국(SO)간 재전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전송 규제를 위한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는 7월 31일 귀국 기자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미국은 지상파 방송사가 SO와 협상에 앞서 두 가지의 선택지를 선택하게 만든다. 바로 의무 재전송 채널 편입과 재전송 동의 후 재전송료 협상 등이다. 이에 ABC 등 대부분 메이저 방송사들은 재전

송 동의를 선택한 후 '성실 신의' 원칙에 따라 SO들과 재전송 대가산정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하지만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전송 협상에서 금전적 대가보다는 자사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의 패키지 전송 등을 요구해왔으나 최근 들어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금전적 대가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이 과정에서 국내와 비슷한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에서도 SO들이 ABC, 폭스, NBC, CBS 등 5대 메이저 지상파 방송을 패키지료 묶어 가입자당 월 18달러를 받으면서도 지상파 방송에는 전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사들의 정당한 저작권을 무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처지인 셈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77개 권역별로 SO들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방송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재전송에 관한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7월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지상파 재전송 관련 법규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운다?



최근 정부는 지난 3·20 사이버 테러 공격 이후, 방송사의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 4사(KBS·MBC·SBS·EBS)를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 송출시스템을 특별 관리하는 것은 '언론사찰'이라는 반발이 광범위하게 퍼지며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다. 게다가 일련의 작업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실무 총괄을 맡는다고 알려져 반발은

더 커졌으며, 당장 지상파 방송사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24일 열린 '방송사 대상 정보통신기반 보호제도 설명회'에서 정부는 언론사찰 의혹을 해소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나 논의 당사자인 방송사 인사들이 모두 퇴장해 결국 행사 자체는 파행을 빚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설명회에 참석하려하자 주최측은 패킷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하며 협박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뒤이어 무리한 취재 자체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도 집단퇴장하면서 결국 설명회 자체가 파탄이 난 것이다. 하지만 타 분야 참석자들의 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설명회는 진행됐다. 그리고 이날 설명회에서 미래부와 한국인터

“UHDTV는 지상파 중심으로 가야”

7월 30일 한국방송협회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UHDTV 상용화 전략이 케이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반대하는 지상파 4사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 6월 '차세대 방송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케이블 방송은 2014년부터, 위성방송은 2015년부터 UHDTV를 조기상용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UHDTV 콘텐츠 제작능력을 갖춘 지상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용화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지어 지상파 방송의 UHDTV 가용 주파수 확보도 담보하고 있지 않아 그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한국방송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유료방송이 아닌 지상파에서 UHDTV 방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UHDTV 콘텐츠와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UHDTV 역량이 빠지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려는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최대 콘텐츠 생산자인 지상

파를 배제한 미래부의 차세대 방송 로드맵이 열차 없이 철로만 건설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진'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협회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정책은 국민의 보편적 정보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도리어 지불 능력이 있는 대상만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빈부격차(Digital Divide)의 심화를 주도하는 꼴이 될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사실 한국방송협회의 이러한 의견표명은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실로 적절한 지적이라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KBS를 중심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1차 UHDTV 실험방송을 무사히 종료하고 현재 2차 실험방송을 훌륭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뉴미디어의 정수로 여겨지는 UHDTV야말로 지상파 중심의 발전 로드맵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방송협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시청자는 동등한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으며, 콘텐츠와 플랫폼이 긴밀하게 연동되는 지상파 방송사이므로 이러한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KBS, 현장으로 뛰어든다

텔시청100%재단이 무료로 설치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난시청 해소 범위가 50세대 이상인 지역은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를, 50세대 미만인 지역은 마을공시청을 신청에 따라 무료로 설치한다. 이후 경상북도에서 TV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안테나, 컨버터 등의 설치·교체를 원하거나, TV 직접수신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안테나와 난시청 지역의 중계기 무료 설치 등과 관련된 신청 절차와 설치 및

그러나 정부는 유료방송의 UHDTV 발전에만 공을 들이며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의 UHDTV 발전을 도외시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미래부는 6월 차세대 방송기술 발전전략은 물론, 지난 7월 17일 있었던 케이블 방송사의 UHDTV 송출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료방송의 UHDTV 발전 로드맵을 맹목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정책도 오락가락이다. 최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UHDTV 국내 도입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폭탄발언을 통해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국방송협회의 미래부에 대한 의견서 전달에 대해 “미래부는 과거 유료방송 전용채널을 중심으로 추진했다가 결국 실패의 쓴맛을 봤던 특정 뉴미디어의 케이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UHDTV 수상기의 보급, 방송 플랫폼의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한 UHDTV 콘텐츠의 공급이라는 3박자가 충실히 맞아야 UHDTV 도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YTN이 받는 수신료, 종편이 못 받는건 불합리”(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7월 31일 기자 간담회에서…동일 규제, 수평 규제의 화원에서 피어난 '특혜'라는 잡초!

“UHDTV 조기 도입 신중해야 한다”(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7월 31일 기자 간담회에서…하여튼 미국을 좋아하시네… 2004년도 그러더니만

수평규제의 화원에서 자란 특혜라는 '잡초'

7월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YTN이 받는 수신료를 왜 종합편성채널이 받지 못하나”고 반문하며 “케이블 가운데 YTN은 SO로부터 수신료를 받고 있지만 종합편성채널은 받고 있지 않는데,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YTN은 (수신료 지급이) 되고 종편은 안 된다는 기준은 곤란하다”고 언급해 파문이다.

현재 종편은 SO에게 자신들이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SO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종편이 의무재전송 및 황금채널 등의 특혜를 받으면서 수신료까지 챙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최근에 발족한 케이블 SO-PP 수신료 협의회에 종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종편은 여전히 수신료를 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YTN이 연 100억 원 수준의 수신료를 SO로부터 받고 있다며, 자신들도 엄연히 채널을 공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경재 위원장의 7월 31일 발언은 이러한 종편의 발언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하지만 종편의 수신료 책정은 그 자체로 난항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종편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인데다 케이블은 물론 대부분의 사회 각층에서 냉담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위원장이 수평규제의 원칙을 통해 종편의 수신료 책정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료방송 중심의 맹목적인 방송정책 육성 및 수평적 규제와 특혜논란의 중심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논란의 중심에는 정부정책의 불합리함이 내재되어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최동환	편집주간 김성훈
편집위원 김윤중 서상원 장진영 송주호 박영석	
편집장 최진홍	취재기자 백선하 이진범 김주옥
기획실 강동균	
인쇄인 성전&화성프린원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02-3219-5635	팩스 02-2647-6813
트위터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최진홍 rgdsz@kobeta.com

이경재 위원장, “UHDTV 도입 서두르지 않는다”

미국 방문 후 7월 31일 기자 간담회 열어

미국을 방문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지시간 7월 26일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서 제시가 로젠워슬 상임위원을 비롯한 고위인사들을 면담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면담이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UHDTV 국내 도입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지어 이 위원장은 7월 31일 귀국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FCC의 고위인사들과 미국의 방송 정책을 청취하는 한편, 뉴미디어 발전 및 기타 다양한 방송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동시에 이 위원장은 “UHDTV 도입을 무작정 서두르면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물론 신기술이 국민에게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을 주면 도입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UHDTV 국내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UHDTV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는 방송기술의 핵심축이다. 그런 이유로 국내 지상파 방송사는 1차 실험방송을 훌륭하게 마치는 한편, 현재 2차 실험방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국내 지상파 중심의 UHDTV 발전에 역행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미국의 사정만 청취한 편협한 의식이라는 비판도 있다. 면담을 진행한 로젠워슬 FCC 상임위원이 “미국도 UHDTV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 디지털 방송 전환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져다줬다”면서 “UHDTV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한 직후 이 위원장의 ‘UHDTV 국내도입은 시기상조’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UHDTV 기술은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제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막강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상파 중심의 UHDTV

활성화 로드맵도 착실하게 동력을 얻고 있다. 세계 UHDTV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중 대한민국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이 UHDTV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비슷한 행보를 걷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이다. 심지어 미국은 UHDTV에 있어 그리 훌륭한 발전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최근 FCC는 주파수 배분에 있어 방송용 주파수를 대부분 통신에 밀어줌에 따라 막상 UHDTV에 활용할 주파수가 부족하자, 부랴부랴 유럽식 UHDTV를 차용해 실험방송을 실시하는 처지다.

또 이 위원장이 “3DTV 기술이 영화 ‘아바타’로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TV에서는 콘텐츠 부족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콘텐츠 부족을 UHDTV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한 부분도 문제다. 물론 이러한 이 위원장의 의견은 지상파 방송사가 아직 UHDTV 콘텐츠를 다수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기술 자체가 국내도입의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UHDTV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내포하고 있어 일정 정도 희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3DTV를 예로 들며 UHDTV 도입 시기상조를 거론하는 방식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다. 3DTV가 예상만큼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3DTV가 완벽히 몰락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3DTV 기술은 각 방송사에서 포터블, 경량화를 기치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콘텐츠 부족은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의 노력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올해 초 CES 2013에서 국내 제조사와 지상파 방송사의 합작으로 훌륭한 UHDTV 발전상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단순한 콘텐츠

부족을 이유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UHDTV기술 도입을 늦춘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이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송 방식을 결정하며 효율이 낮은 미국식 전송 방식을 채택한 뼈아픈 역사가 있다. 이때의 잘못된 결정은 진정한 디지털 TV 시대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도 헤매고 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임에도 불구하고 700MHz 대역 주파수를 대부분 통신에 할당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고작 방송에 할당된 228MHz폭으로 새로운 뉴미디어의 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악전고투 끝에 UHDTV 기술 선도화를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수장은 국민의 편익을 이유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늦추자는 발언을 하고 있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천신만고 끝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구축한 새로운 기술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는 한편, “만약 진정한 국민의 편익을 고려한다면,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사의 UHDTV 역량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4년 디지털 전송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미국식으로 정할 때처럼, UHDTV에 있어 세계의 조류에 한창 떨어진 미국의 사례를 맹목적으로 신봉하기 보다는 우리가 앞장서서 UHDTV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케이블 사업자와 공동으로 UHDTV 송출식을 가지며 사실상 유료 방송의 UHDTV 방송을 천명했으며, 위성방송사도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해당 기술 플랫폼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명확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이런 정부와 거대기업의 오판은 무선 마이크로 주파수 이동 등으로 고스란히 국민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 주파수 정책의 총체적 난맥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방통위와 미래부는 자신들의 오점을 바로잡지 않고 무책임한 주파수 정책, 즉 통신에 주파수 자원을 몰아주기 위한 막무가내식 의사결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통신용 주파수 할당에 목을 매는 정부나, 900MHz 대역 주파수를 자신들의 오판으로 낙찰받은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통신사나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치명적인 패착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분석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시청자 편익은 뭔가요?

최근 방송기술 업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특히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바로 “시청자 편익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시청자 편익’은 지상파 MMS를 논할 때도,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결정할 때도, UHDTV 활용방안을 결정할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심지어 미래창조과학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의 8VSB 허용에 대해 “시청자 편익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시청자 편익이라는 단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해 중국에는 정치적으로, 더 나아가 특정 진영의 특혜를 주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다.

쉬운 예로 지상파 MMS를 보자. 현재 지상파 MMS에 대해 지난 5월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한국방송협회 임원진과 만나 “현실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없다. 그저 ‘시청자 편익’을 고려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지지부진할 뿐이다. 물론 지상파 MMS에 대한 냉정한 가치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여론의 편향성을 배제한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지상파 방송사는 무료 보편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던가. OECD 국가 중에서 시청자에게 무료로 다양한 지상파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점을 굳이 상기하지 않아도, 지상파 MMS는 정부부처가 말하는 시청자 편익에 가장 가까운 기술 플랫폼이다. 그런데 이 위원장은 기준도 모호한 시청자 편익을 운운하며 지상파 MMS 도입에 적극적인 리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도 있다. 현재 해당 주파수는 정부부처의 엉터리 주파수 정책 덕분에 방송과 통신의 끝 모를 싸움에 소모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존하는 모든 가용 주파수를 통신에 몰아주고도 통신비 인하 등은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는 미래부는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해당 주파수의 통신 할당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어떤가. 역시 ‘시청자 편익’에 의해 결정하겠다는 말 뿐이다. 특히 이경재 위원장은 미국에 한 번 다녀온 다음 노골적으로 해당 주파

수에 시청자 편익을 대입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UHDTV에도 이어진다. 최근 이경재 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해 UHDTV에 있어서는 별다른 성공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FCC의 상임위원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UHDTV 국내 도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물론 이유는 “콘텐츠 제작 능력이 부족하고, 시청자 편익에 부합되는지 판단해야 한다”에 있었다. 여기에도 시청자 편익이 나온 것이다. 도대체 방통위 위원장이 생각하는 시청자 편익이 뭐기에 지상파 UHDTV 2차 실험방송이 한창인 지금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인가. 많은 관계자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특혜논란이 일고있는 유료방송의 8VSB 허용에 있어서도 시청자 편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최근 미래부는 종편 비밀 담합 TF 여파로 한 차례 곤혹을 치른 유료방송의 8VSB 허용을 전제로 하는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유료방송의 8VSB 허용은 종편특혜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하자 미래부는 ‘시청자 편익’에 맞춰서 고려하겠다는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되돌아 볼 때 미래부와 방통위가 생각하는 시청자 편익은 별로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는다. 그저 다양한 방송현안에 있어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시청자 편익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꾸민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시청자 편익을 고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극히 미약해 보일뿐더러 그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다.

후한 말 조조는 황제를 등에 업고 각지의 군웅들에게 멧대로 명령을 내렸다. 중화사상에서는 하늘에서 황제가 나오고, 황제로부터 ‘대 의’가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조는 황제를 보필함으로써 황제의 대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고, 그 대의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만큼 흐릿하고 거대한 단어는 묘한 마법을 지니는 법이다. 이제 우리는 ‘시청자 편익’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때가 되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지난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에 약 3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자금 약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의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지난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6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사옥의 새 건물 건축을 한일건설에 넘기면서, 건물 완공 이후 상층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3.3㎡당 1,700만 원인 부동산을 7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장 회장이 한일건설로부터 개인 자금을 빌리게 되면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일보는 2008년 1월 2일 구조조정 작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장 회장 등 경영진의 부실 경영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다시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이에 한국일보 비대위는 장 회장의 구속 소식을 듣자 트위터를 통해 “구속 영장이 발부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조금 전 구치소로 향했다. 사필귀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한국일보의 신문

(1면에 이어)이 대목에서는 2011년, 돈 잔치에서 시작해 돈 잔치로 끝난 통신사의 주파수 경매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KT는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 득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800MHz 대역 대신 900MHz를 총 2,500억 원의 비용으로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2012년 10월 KT가 해당 대역에 LTE 기지국 설치를 개시하자 RFID(전자태그), 고출력무선전하기(코드리스폰, 900MHz 맥스 무선전화기 등)와 심각한 혼신을 일으켜 결국 기지국 설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KT는 당시 경매를 주도했던 임원들을 문책성 경질하는 한편, 구 방통위에 문제 해결을 무책임하게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다른 통신사들이 LTE-A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KT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자사의 낮은 품질을 증명하는 뼈를 깎는 시연회를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LTE 주파수 할당을 두고 노동조합과 공조한 대대적인 반발에 나선 근본적인 원인으로 당시 주

파수 경매에서 KT 스스로가 저지른 패착에서 기인한다.

현재 KT는 자신들이 할당받은 900MHz 대역 주파수 중 905~915MHz 대역을 1MHz씩 하측으로 이동하여 904~914MHz로 이동하는 주파수 클리어를 요청하고 있으며, 자사 LTE 대역인 884~894MHz과의 혼선을 우려한 LG유플러스가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중이다.

우리는 구 방통위의 모바일 공개토 플랜이 가지는 치명적인 패착과 더불어 그에 따른 부정적인 후폭풍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적 오판에 의해 주파수 환경을 송두리째 흔드는 통신사를 보았고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생생하게 확인했다. 즉, 700MHz 대역 주파수를 무조건 통신에 할당하기 위해 구 방통위는 무작정 모바일 공개토 플랜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부터 900MHz 대역 통신 LTE 활용방안 등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전무하

방통위, 아리랑 TV는 내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아리랑 TV(국제방송교류재단)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새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방통위는 효율성을 내세우며 아리랑 TV를 자신이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제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의 발언 때문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미국 출장을 갔을 때 미국 전역에서 아리랑 TV를 시청할 수 있었지만 빈약한 점이 많아 보였다”며 “아리랑 TV는 문제부 소속이지만 방통위 기금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로) 단일하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실제 취재 결과,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아

리랑 TV의 소유권은 당연히 방통위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며 “60% 이상의 재정지원을 하는 방통위와 행정적인 관리감독 기관인 문제부가 동시에 아리랑 TV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원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 상황을 정리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부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방통위가 방송법에 의거해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할 뿐, 더 이상의 간섭은 없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17년 동안 국제 방송사로서 위상을 다져온 아리랑 TV의 관리주체가 문제부에서 방통위로 바뀌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방통위가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세계 1억 수신가구 돌파의 금자탑을 쌓은 아리랑 TV를 망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 문제부의 주장대로 방통위의 아리랑 TV

백선하 baek@kobeta.com

한국방송대상 수상자 확정

7월 29일 한국방송협회는 제 40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자를 확정 및 발표했다.

한국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진흥을 위해 1973년부터 시작된 권위있는 시상식이다.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예심과 본심을 진행한 결과 작품상에 △예능버라이어티TV부문 KBS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교양정보 라디오 부문 MBC 휴먼라디오 우리 △중단편드라마TV부문 SBS 추적자 THE CHASER △예능콘서트부문 EBS 스페이스공감-특별기획 ‘말죽거리 음악다방 제이레빗 편’ △다큐멘터리 라디오 부문 CBS 특집 다큐멘터리 ‘불안’ 등 29개 부문에서 31편이 선정됐다.

또 개인상에는 △나나운서상 KBS 임수민 △라디오 진행자상 이동우, 김다혜 (PBC·이동우, 김다혜의 오늘이 축복입니다 MC) △프로듀서

상 정지은 (EBS ‘다큐프라임-자본주의’ 연출) △성우·내레이션상 황인용 (EBS ‘다큐프라임-자본주의’) △연기자상 손현주 (SBS 추적자 THE CHASER) △코미디언상 신보라 (KBS 개그콘서트) △가수상 싸이 등 총 24인이 수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송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방송기술인들도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에 △조명상 MBC 김원영 △영상기술상 MBC 오영삼 △음향기술상 MBC 박규소 △방송기술혁신상 KBS 목하균 등 4명도 개인상 부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한편 명예의 대상은 방송의 날인 9월 3일에 개최되는 제40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제23-2대 대의원대회 열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15층에서 제23-2대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65명 중 50명(위원장 포함)의 대의원들이 참석해 제23-1대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제23-2대 회계연도 예산 승인, 제23-2대 사업계획 승인 및 회칙개정 등을 처리했다.

이선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사무처장의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대의원대회에서는 먼저 지난 1년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활동 내용과 주요 성과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무처장은 “올해는 사단법인 방송기술교육원을 설립해 지난 몇 년간 진행되어 온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이어 ‘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사업 직군별특성화교육 미래미디어 방송기술 창의 인재 양성사업’을 시작하고, ‘2013 WORLD FORUM’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한국방송기술인

연합회가 새로운 모습을 많이 선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23-2대 사업계획을 발표한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이후 많은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시청자 복지 향상과 방송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뒤 “정착 개발과 KOBETA 서포터즈 운용, 〈방송기술저널〉과 〈월간 방송과기술〉의 인터넷 서비스 강화, 디지털방송용어사전개정 추진, KOBА 전시회의 글로벌화 등을 추진하고 방송기술인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에도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회칙 제30조에 근거해 회칙 제12조 1항을 개정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1면에 이어)하지만 700MHz 대역 주파수와 지상파 중심의 UHD TV 발전은 그 자체로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이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이 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다. 물론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부족을 이유로 UHD TV 발전 시기상조 논리를 내세운 점을 역으로 해석하면 지상파 중심의 UHD TV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어떤 논리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당하지 못하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 통신 알박기를 원천 폐기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던 판국에 방통위의 ‘무리할 정도의 유연한 접근’은 진정한 지상파 방송기술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친통신 성향의 언론들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8월

에 나올 미래부-방통위 주파수 공동 연구반의 결과에 잔뜩 기대를 거는 눈치다.

이제 700MHz 대역을 둘러싼 주파수 전쟁도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공동 연구반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면, 주파수심의 의협의회라는 거름종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론이 실질적인 ‘최종안’이 될 확률이 높다.

주파수 통신 할당을 등에 업은 미래부와 방송 할당을 주장하는 방통위가 일대 격돌을 앞둔 셈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방통위의 분위기는 미래부만큼 확고하지 못하다. 게다가 방통위의 최근 움직임을 단순히 미래부와외의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설정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종편, 사업자 승인 전후 주주 달라” 부실 저축은행 투자, 쪼개기 출자도 논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 권센터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는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편성채널 승인 전후의 주주 변동 내역과 승인 심사 결과 자료(속기록) 등을 공개했다.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가 공개한 이번 자료는 지난 달 29일 1차 발표 결과와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장 교부 당시 변경된 주주 명단의 변동 사항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먼저 TV조선과 JTBC, 채널A 등 종편 3곳의 승인 신청 당시와 승인장 교부 당시의 주주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46개 회사가 당초 991억2,000만 원에서 822억3,600만 원으로 출자금액을 줄였고, 120개 회사는 총 1,606억300만 원의 출자 약정을 아예 철회했으며, 종편 사업자 선정 이후 92개사가 총 1,594억7,300만 원을 신규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 측

은 “신규 법인주주들의 경우 그 실체를 검증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며 “방통위 심사 기준을 전제로 할 때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주요 주주들의 출자 내용 변경은 없더라도 그 외 기타 법인주주들의 출자 내용이 이처럼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애초 출자약정 내용을 기초로 한 사업자 승인심사 과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 앞가림도 못하던 부실 저축은행 중 상당수가 출자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승인 신청 당시에는 8개 저축은행이 JTBC, 채널A, 뉴스Y, 머니투데이 등 4개 사업자에 총 307.4억 원의 출자를 약정했고, 그 중 6개 저축은행이 최종적으로 JTBC와 채널A에 총 131억 원을 출자했는데 이 중 5개 저축은행이 사업자 승인 직후 차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출자 금액은 총 237억 원으로, 예금자들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게다가 토마토 2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1년

9월 영업 정지됐는데 그 직전에 채널A의 신규 출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배임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상당수 법인들이 여러 사업자에 중복 투자하거나 동일한 주주가 ‘쪼개기 출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개별주주가 아니라 공동의 지배권 하에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를 모두 포괄해야 하는데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 규제 외에는 모두 개별주주만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법인주주의 사실상 지배자에 대한 심사 항목이 없어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방송의 독립과 중립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주주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는 “주요 주주를 제외한 기타 주주의 지분율은 주요 주주에 못지않은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신규 주주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방통위가 인허가 규제기관으로서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승인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전 주주 구성 변경에 관해 주요 주주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지만 기타 주주 구성 변경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해 방통위가 종편의 불법을 눈감아 준 꼴이 됐다”면서 이후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해직 언론인, 자신의 자리를 찾을까?

원회 측에서는 한광옥 위원장과 한경남 갈등에방조정분과위원장, 배창호 위원, 김준용 위원이 참석했다.

이에 한광옥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해직 언론인)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계셔야 될 위치에 있지 못하고 불행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MB 정권에서 참혹한 형태의 언론 탄압, 장악 시도, 불법이 저질러져 언론인이 저항했고 이는 정당했는데도 사규 등을 이유로 내쫓았다”면서 해직 언론인 문제를 국민대통합위원회 주요 의제로 삼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강 위원장은 “언론계 문제가 전체 사회 갈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해직 언론인들도 복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MBC 박성호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MBC 대량 해직 사태에 대해 ‘안타깝다, 사태 해결을 바란다’고 얘기했으며, 해직 언론인 문제는 일반 노사 문제, 즉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노사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용마 기자는 “지금 정부가 언론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 의해 장악된 언론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방기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기에 YTN 우장균 기자는 “5년의 해직 기간 동안 해직 기자 3명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5년차 해직 기자가 10년차 해직 기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무역 10위권 일파인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세계 몇 위에 해당하는지가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 기자는 “복직을 구걸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다른 수많은 기자들이 ‘나도 저항하면 해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론 후진국”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유신 기자는 YTN 불법 사찰 사례를 언급한 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언론계 상황이 안 바뀌는 것은 지난 정권 때와 결국 똑같은 것 아니냐”고 말했으며 이성주 언론노조 MBC 본부장과 김종옥 언론노조 YTN 지부장등은 “새 정권이 출범한 만큼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에 화답한 한광옥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두환 정권 시절 자신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사실을 복기하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한 언론처벌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님을 강조하는 한편 “5년, 1년 해직 기간 동안 참고생 많이 했다”며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출범한 지 불과 20일밖에 안 되고 해비가 될 뻔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한 말을 해주진 못 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갖고 나름대로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단신 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방송진흥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진흥정책 자문위원회’는 장종혁 애플러스리서치코리아 부사장, 채준석 ETR 방송통신미디어연구부문 소장, 박정욱 그래픽 대표이사,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김인식 스마트TV사업협회 부회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등 19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방송진흥 정책을 미래부가 맡게 된 것은 방송이 지닌 산업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방송을 창조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만큼 방송 산업이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달라”고 자문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첫 회의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 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장종혁 애플러스리서치코리아 부사장과 채준석 ETR 소장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각 위원들간 자유로운 논의 시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오는 10월까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세부 내용 등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한국방송협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63칸벤션센터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그간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로 활동하던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안을 공식적으로 가결했다. 1974년 2월 한국방송협회가 31개 회원사로 창립된 지 39년만의 일이다.

한국방송협회는 격동하는 방송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법인격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방송단체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사단법인 전환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한국방송협회는 임기가 만료된 김현영, 이재원, 조한제 이사의 연임을 의결하고, 황용구 MBC경남 사장을 신임 감사로 선임해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김주옥 kjo5554@kobeta.com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2010년 ‘외주제도개선협의회’ 및 2011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분야별 특별 팀(T/F)의 구성, 운영 및 수차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이는 최근까지의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출연료 지급 시점과 기준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권리 귀속 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열린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한국방송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을 비롯한 관련 주체 관계자들에게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건설한 제작사 선정 등, 출연료 등의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표준계약서의 시장 적용 상황을 보아 표준계약서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국내 콘텐츠 산업 총괄지원 기관과 IT 전문 기업이 새로운 한류 콘텐츠(K-Culture)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홍성표)과 LG CNS(엘지씨엔에스·사장 김대훈)는 우수 한류 콘텐츠(K-Culture)를 발굴해 대중화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서울 마포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LG CNS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우수 문화기술(CT) 업체 발굴과 한류 콘텐츠(K-Culture) 유통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 양측은 또 중소 문화기술(CT) 업체 및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문화기술(CT) 및 제작 콘텐츠 활용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LG CNS의 IT 기술을 출판, 영화, 뮤지컬, 연극, 만화 등 다양

한 콘텐츠 분야 문화기술(CT)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국내 문화기술(CT) 대중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성표 원장은 “문화기술(CT)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축이자 기술 간 융합을 이끌어 내는 촉매제”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문화기술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장르를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LG CNS는 중소기업 문화콘텐츠 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LG CNS 김대훈 사장은 “대한민국 대표 IT서비스기업으로서 그간 축적한 정보기술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류 콘텐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은 물론, 콘텐츠 제값 받기 흐름이 자리 잡아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옥 kjo5554@kobeta.com

최근 몇 년 동안 IT 분야에서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관련된 ‘클라우드, CLOUD’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출원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2~3년 전부터 각종 세계박람회나 기술전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었던 국내 최대 IT 전시회 ‘월드 IT 쇼 2013(World IT Show 2013)’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IT 서비스’가 주요 전시품목군으로 전시된 바 있다. 이밖에에도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할 수 있는 정보통신환경을 의미하는 ‘UBIQUITOUS’의 약자인 ‘UBI’, ‘3D’, ‘OLED’ 등과 결합된 상표가 다수 출원·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욱 상표3심사팀장은 “상표나 브랜드가 기업전략에서 중요해짐에 따라 이제는 기술의 변화를 특화뿐 아니라 상표출원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게 되었다”며 “클라우드, CLOUD와 같이 모두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트렌드가 되거나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식별력 있는 부분을 결합하여 출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방통위의 광폭행보 이해하기

한동안 방송관련 단체를

두루 섭렵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국정원 국정조사 등

굴직굴직한 현안에 매달려

야당의 장외투쟁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등장한 판국에,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도

광폭행보를 통한

공격적인 영역

넓히기에 돌입하고 있다.

700MHz 주파수에 한걸 유연해진 위원장?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7월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화끈한 먹거리를 제시한다면 굳이 방송용 주파수 활용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말을 앞뒤 맥락을 살펴 분석하면 뉘앙스가 묘해진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의 활용방안과 주파수 공동 사용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둔 상황에서 ‘방송용 주파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해당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시청자 편익에 따르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정치인다운 처세다.

다. 최근 불거진 아리랑 TV에 대한 소유권 주장도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

두 번째는 UHD TV 도입 시기상조설로 확인 가능한 기술개발 주제에 대한 논란이다. 이 위원장은 UHD TV 시기상조를 언급하며 콘텐츠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판단에는 ‘콘텐츠를 담당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역량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전제는 곧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해당 기술의 도입을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당장 이 위원장이 ‘지상파 중심의 UHD TV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장밋빛 분석을 경계하며, 이 위원장이 주장한 UHD TV 시기상조설 자체가 세계 방송기술의 맥락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는 실정이다.

UHD TV 도입 시기상조설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에 있어 시청자 편익을 이유로 비교적 호락하게 그 기준을 제시한 것과 달리, UHD TV에 대한 이 위원장의 발언은 의도하는 바가 꽤 명쾌한 편이다. 한 마디로 콘텐츠가 부족하고 시청자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UHD TV를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나 이 발언은 평면적인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는 다면적 요소의 충돌이 격렬하게 일어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큰 분류는 두 가지다.

우선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이 위원장 발언의 ‘정치적 유발요소’다. 이 위원장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송이슈에 대해 미래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는 미래부의 등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좁아진 방통위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진의가 어찌 되었든, 이 위원장은 미래부와 대립을 통해 정책 엿박자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UHD TV 도입 시기상조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최근 “UHD TV 발전을 위해 방통위와 협의할 생각이 있다”는 발언을 한 부분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유료방송 중심의 UHD TV 발전을 추구하는 미래부를 정조준하며, 즉 이러한 전략적 판단이 이 위원장으로 하여금 UHD TV를 통한 창조경제를 포기했다는 말도 서슴치 않게 만들었던 것이

미국 방문 이전과 이후

7월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경재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700MHz 대역 주파수 상하위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는 듣기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구 방통위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안을 정할 당시 등장한 ‘통신 주파수 알박기’를 하나의 의견으로 치부한다는 뉘앙스가 풍기는 언급이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이 위원장이 미국에 다녀온 직후 180도 달라졌다.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UHD TV 국내도입 시기상조설까지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 이르러 이 위원장이 미국의 FCC를 방문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가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해버려 막상 UHD TV에 활용해야 할 주파수가 부족해지자 부랴부랴 자신들의 방식을 포기하고 유럽식 UHD TV 테스트에 돌입한 나라다. 그런데 UHD TV에 있어서 최소한 미국에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 방통위 수장이 FCC 상임위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당연히 그 상임위원은 자신들에게 약세인 UHD TV에 대한 불합리한 논의를 이어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그러한 FCC 상임위원



의 생각을 고스란히 자신의 머리에 담고 돌아온 격이다. 이런 부분을 두고 비록 가정이지만, 일각에서는 2004년의 디지털 전송 방식 선정의 폐해를 떠올리곤 한다. 당시에도 주파수 효율이 좋은 유럽식 디지털 전송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당시 정부는 가전사들의 북미 시장 진출이라는 거창한 대의명분을 이유로 미국식 방식을 맹목적으로 택했다.

그리고 이어지기 시작한 주파수 잔혹사는 2004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UHD TV에 있어서

그다지 훌륭한 로드맵을 보여주지 못하는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그릇된 DNA가 2013년에도 재현되는 셈이다.

방송정책의 엿박자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한편, 맹목적인 고정관념에 빠진 채 시청자 편익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으로 사안을 정리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부처의 할 일이 아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m.kobeta.com

www.kobeta.com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방송기술저널 온라인

2주에 1회 총 8면으로 발행되어 정부 및 전국의 방송사, 대학, 연구단체에 약 5만 여 독자를 보유한 오프라인 [방송기술저널]이 온라인 및 SNS를 통해 더욱 빠르고 신속한 뉴스를 전달합니다.

뉴스에 스피드를 더하다

· 방송기술저널 모바일(m.kobeta.com)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방송기술저널]의 새로운 뉴스 서비스입니다.

· 방송기술저널 페이스북(/kobetajournal)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기술저널]의 목적인 심층 분석 보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방송기술저널 네이버 오픈캐스트(KJ644)

네이버 검색창에서 오픈캐스트를 검색한 후 해당 페이지에서 [방송기술저널]을 검색하세요.

· 방송기술저널 블로그(http://blog.naver.com/kobetaj)

다양한 방송기술 뉴스를 블로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트위터(KOBETA_com)

트위터를 통해 더욱 빠른 [방송기술저널]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집에’ 방콕족을 위한 영화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다들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이다.

여행을 가자니 교통체증과 번잡함에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 속에 파묻혀 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도 걱정이다. 평상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는 말 그대로 파김치가 돼 출근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휴가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분들을 위해 '방콕족(휴가철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 몇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싶다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감독 라이언 머피
출연 줄리아 로버츠, 허비에르 바르뎀, 리처드 젠킨스,
바이올라 데이비스 등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남편, 맨해튼의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언젠가부터 이게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삶인지 의문이 생긴 서툰한 살의 저널리스트 리즈. 진짜 자신을 되찾고 싶어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정해진 인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보기로 결심한다. 일, 가족, 사랑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무작정 일 년 간의 긴 여행을 떠난 리즈. 이탈리아에서 신나게 먹고, 인도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발리에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동안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영화는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에세이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인만큼 영화의 진행은 단조롭다 못해 지루하다. 하지만 잔잔하게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고, 이 영화를 통해 차마 내 돈 주고 직접 보지 못하는 로마의 풍광, 두려워 엄두가 안 나는 인도의 수련과정 등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또 다른 위안을 얻을 수도 있다.



청량한 바다를
느끼고 싶다면
그랑블루

감독 릭 베송
출연 장 르노,
장-마크 바, 로잔나 아레트, 폴 세나르 등

그리스 작은 마을의 자크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잠수 사고로 잃고 바다와 돌고래를 가족으로 여기며 외롭게

성장한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마을 친구인 엔조는 잠수 실력을 겨루는 경쟁대상이자 단 한 명의 우정을 다지는 친구. 그렇게 자크는 유일한 안식처인 바다와 돌고래, 그리고 엔조와 성장해 간다. 오랜 시간이 흘러 프리다이빙 챔피언인 엔조의 초대로 재회하게 된 두 사람. 그리고 자크는 대회에 참가하면서 보험사 조사원 조안나와 일생에 단 한 번일지 모르는 눈부신 사랑에 빠진다. 마침내 대회에서 자크가 승리하게 되고 엔조는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잠수를 시도하다 결국 자연 앞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얼마 전 리마스터링 감독판으로 돌아와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끝없이 펼쳐지는 푸르른 바다 속을 배경으로 돌고래와의 우정을 통해 전달하는 시원함으로 '여름의 영화로 손꼽히고 있는 그랑블루'. 3040세대에게는 20년 전 감동을 다시 한 번 아련하게 돌려주고, 그 감동을 만나지 못했던 1020세대에는 또 다른 명작의 감동을 준다는 평을 받으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차가운 겨울을
보고 싶다면
설국열차

감독 봉준호
출연 크리스 에반스,
송강호, 에드 해리스,
존 허트 등

새로운 빙하기. 그리고 설국 17년. 기상 이변으로 모든 것이 공포 열어붙은 지구. 살아남은 사람들을 태운 기차 한 대가 끝없이 궤도를 달리고 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이 바글대는 빈민굴 같은 맨 뒤쪽의 꼬리칸,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이 술과 마약까지 즐기며 호화로운 객실을 뒹굴고 있는 앞쪽칸. 열차 안의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 17년째, 꼬리칸의 젊은 지도자 커터스는 긴 세월 준비해 온 폭동을 일으킨다.

기차의 심장인 엔진을 장악, 꼬리칸을 해방시키고 마침내 기차 전체를 해방시키기 위해 절대권력자 월포드 가도사리고 있는 맨 앞쪽 엔진칸을 향해 질주한다.

원작 만화의 설정만 가져와 재창조하다시피 한 작품으로 봉준호 감독 특유의 디테일을 엿볼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싹함으로 더위를
극복하고 싶다면
숨바꼭질

감독 허정
출연 손현주,
문정희, 전미선 등

개봉을 앞두고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은 영화. 고급 아파트에서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성공한 사업가 '성수'는 하나 뿐인 형에 대한 비밀과 지독한 결벽증을 갖고 있다. 어느 날 그는 형의 실종 소식을 듣고 수십 년 만에 찾아간 형의 아파트에서 집집마다 새겨진 이상한 암호와 형을 알고 있는 '주희' 가족을 만난다. "제발 그 사람한테 제 말 좀 그만 흘쳐보라고 하세요." 어린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주희'는 자신의 집을 훑쳐보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낯은 아파트의 암호를 찬찬히 살펴보면 '성수'는 그것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성별과 수를 뜻하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형의 아파트를 뒤로한 채 자신의 안락한 집으로 돌아온 그 날, '성수'는 형의 아파트에서 봤던 암호가 자신의 집 초인종 옆에 새겨진 것을 발견한다. 사라진 형, 숨바꼭질 암호, 서로 다른 두 가족에게 찾아온 충격적 진실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두 가장의 사투가 시작된다.

휴가는 '일상적으로 해오던 업무나 생업을 잠시 접고 쉬는 것'을 뜻한다. 열심히 일했으니 푹 쉬고 돌아오라는 일종의 보너스 기간이다. 따라서 진정한 휴가를 보냈다면 휴가를 통해 얻은 새로운 활력으로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집안에서 영화 한두 편 보면서 편히 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휴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백선하 baek@kobeta.com

당신의 여름휴가,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휴가철. 당신의 여름휴가는 안녕하십니까? 만약 아직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북적이는 해수욕장과 워터파크를 피해 보물같은 여행지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당신이 상상하던 여름이 기다립니다.

사랑의 섬, 외달도



목포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진 달리도의 바깥쪽에 위치한 '사랑의 섬 외달도'는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곳이다. 그런데 왜 사랑의 섬이라고 불리냐고 하늘에서 바라본 외달도의 모습이 마치 물개 한 쌍이 정답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서 그렇다! 그래서 섬 이름도 화끈하게 사랑의 섬, 외달도! 달달하고 부드러운 러브 파라다이스인 섬이다. 외달도는 아직 청정해역의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이 다도해의 아늑함을 느끼게 한다. 게다가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외로운 바다위의 풍경은 그 자체로 일품! 1700년대에 달리도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외롭게 떠 있는 섬이라 하여 외달도라고 이름을 지었다니 이참에 바다의 해변에서 서서 고즈넉히 번지고 있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한껏 즐겨보는 것도 외달도 여행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다.

point 외달도 여행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아이들에게는 각종 체험과 놀이의 장소를 제공하며, 연인들은 해변가를 거닐며 속삭이는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 세상의 풍경이 아니구나! 동해시 무릉계곡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에 위치한 무릉계곡은 삼화사 서쪽에 금란정이라는 정자 부근에 수백 평의 넓은 암반이 있고 군데군데 맑은 못을 이루어 절경을 이루기로 유명하다. 통진 호암소에서 용추폭포까지 이르는 약 4km에 달하는 계곡을 무릉계곡이라고 부른다. 조선 선조 때 삼척 부사 김효원이 이곳을 방문해 수려하고

아름다운 계곡의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해 '무릉계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지며 신선이 노닐었다는 전설에 따라 '무릉도원'이라 불리기도 한다. 동해시의 주산격인 두타산(頭陀山)과 청옥산(靑玉山)을 배경으로 하는 이 계곡은 기암괴석과 무릉반석, 푸른 못 등으로 특히 유명한 인근의 망상 해수욕장과 천곡동굴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는 곳이기도 하다. 또 무릉계곡은 고려시대 이승휴가 머물며 '제왕운기'를 집필한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곳을 찾았던 많은 시인 묵객들의 기념각명(刻名)이 무릉반석(盤石)에 새겨져 있어 계곡 전체가 성스럽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무릉계곡의 정상 부근에는 용추폭포(龍湫瀑布)와 쌍폭(雙瀑)이 장관을 이룬다.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2월 5일 명승 제37호로 지정되었다.

point 수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며 반석 위에 남긴 기념각명의 뜻을 음미할 것 용추폭포와 쌍폭의 장엄한 풍경을 감상할 것 그리고 인근의 망상 해수욕장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심 한복판의 동굴, 천곡동굴까지 구경하면 당신은 이미 여름휴가 종결!

최진홍 rgdsz@kobeta.com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장비, 음향기기간)전시회 무료
-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700MHz 대역 주파수, 이제 종반전이다

7월 31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듣기에 따라 천차만별의 해석이 가능한 말들이 많이 나왔다. 재송신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도 나왔고 미국의 사례에 빗대어 나온 논리도 다수였다. 특히 UHDTV에 대한 생각은 압권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자.

이경재 위원장은 UHDTV에 대해 실로 재미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UHDTV 발전을 무조건 해내야 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녀와서 보니 이게 아니더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즉 이 위원장은 UHDTV를 당연히 이룩해야 할 성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차등관계를 둔 역학관계의 산물로 이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도 분석의 경중이 필요하다.

이경재 위원장은 콘텐츠가 부족해 결국 3DTV가 사그라 들었다는 절대적 명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이런 부분은 약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3DTV의 흥망성쇠를 이 지면에서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겠다. 콘텐츠 수급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경재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 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전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경재 위원장이 지상파 방송사의 UHDTV 수급에 문제가 있

어 해당 기술의 도입을 늦추겠다고 말한 부분에 분명히 지상파 입장에서는 희망을 보았으리라 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700MHz 대역 주파수다. 이제 방송과 통신의 전쟁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막대한 명제.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미래부가 확실한 먹거리를 가지고 오면 해당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을 명목적으로 내세우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은 난리가 났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에게서 나올 말이던가!

우선 700MHz 대역 주파수의 개념부터 보자. 700MHz 대역이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 2012년 12월 이후 발생한 700MHz 대역의 여유주파수(698~806MHz 대역으로 108MHz 대역폭, 채널 52번부터 69번까지)를 말한다. 700MHz 주파수 대역은 신호전파의 회절성이 강하고 신호감쇄(attenuation)가 적으며 신호전파의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라디오, TV, 이동통신 등 방송 및 통신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파수 관리는 우리나라는 주파수 정책이 이원화되어 있다. 미래부는 통신용 주파수를 관리,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를 맡고 방통위는 방송용 주파수 관리, 소관 업무에 관해 법령·재개정(법률

제출권 및 행정 입법권)을 비롯해 포괄적인 구성 및 개념에 대한 예산관리 및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무조건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미래부 장관이 SO, 위성 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하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재·개정 시의 경우 방통위에 사전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주파수 회수, 재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가 갖도록 되어 있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구 방통위에서 처음 등장한, 최시중 씨가 주도적으로 구축한 모바일 공개토 플랜에 있다. 방통위는 2012년 1월 20일 '모바일 공개토 플랜'을 기습적으로 의결하면서 108MHz 폭 중 40MHz 폭을 우선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대목은 방통위원장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두고 두고 화근이 된다.

그리고 700MHz 중 40MHz를 하위대역(728~748MHz)과 상위대역(783~803MHz), 각각 20MHz씩 분할하여 통신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통신용 40MHz와 보호대역 13MHz로 이미 배정하였고, 나머지 55MHz도 30MHz와 25MHz로 나눠 배치함으로써 대출력인 방송과 소출력의 이동통신이 혼재하

서도 일 고려미디어연구연대 연구3팀장

기 매우 어려운 배치를 하고 있어서 통신용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바로 이 대목을 지상파 방송사는 알박기라 부른다.

7월 31일 이경재 위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모바일 공개토 플랜, 즉 미래부가 계승한 모바일 공개토 플랜 2.0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문제는 더 암울하다. 방송의 진흥과 발전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안해야 하는 부처에서 유료방송 중심의 미래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방통위는 시청자를 최우선으로 놓고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묻고 싶다. UHDTV는 창조경제를 무시하더라도 도입시기를 늦추는 한편, 왜 주파수는 전사적인 전환에 앞장서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다. 그래서 이상하다. 미래부-방통위 주파수 공동 연구반의 결과물에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동시에 정부부처의 의사결정에 통신재벌을 비롯한 다양하고 강력한 이익단체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 주파수 정탈전 자체는 공익적인 요소를 충분히 담아야 하는 사회적 담론의 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올바른 주파수 공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가지길 바란다.

윤 일 록 창조미디어연구소 소장

디지털 라디오, 감수성의 역사

흔히 라디오를 아날로그의 감성이라고 말한다. 그 만큼 우리는 라디오에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 모두가 잠든 밤, 홀로 이불 속에 파고들어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며 행복한 기분, 비오는 날 오후 세차게 내리치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의 쾌감. 그렇다. 단언컨대 라디오는 우리의 심장과 가장 닮아있는 근원의 정서다.

하지만 굳이 1979년 영국의 2인조 그룹 버글스(Buggles)가 'Video killed the radio star'를 목놓아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전통적인 라디오는 그 역사의 명맥을 놓아버렸다는 것을, 그러나 당신은 아는가? 라디오는 아직도 살아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있다. 실제로 현재 생활에서도,

사상 최초로 음악과 뮤직비디오 전문채널을 표방하며 등장한 미국 케이블 채널 MTV가 1981년 8월 1일 개국 당시 첫 방송으로 버글스(Buggles)의 "Video killed the radio star"를 내보낸 것은 잔인한 처사였다. 본격적인 TV의 시대를 알리는 기념비적인 날에 라디오의 죽음을 말하다니. 그러나 그 만큼 라디오는 성숙했다. 라디오는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일차적인 '라디오의 매력

특성'을 확인하는 것부터 이루어졌다. 인간의 감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라디오는 소리에 의존하는 청각 매체다. 이는 상상력을 자극함과 더불어 논리보다는 감정적, 정서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라디오 수신기가 소형화되면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도록 했고 청취 행위를 개인화했다. 이는 성공적이었다. 라디오는 TV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을 보장받았고, 이제 그 생명력은 영속성까지 가지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라디오의 저력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디지털 라디오의 미래에 다시 섰다. 뉴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하며 디지털 라디오의 역사가 다시 한 번 우리의 가슴을 울릴 시대가 온 것이다. 기존 AM, FM 방송과 같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신호 형태로 압축, 방송하는 서비스의 '디지털 오디오 방송'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현재 진행형이며, 아직 만들어야 할 미래가 많지만 말이다.

디지털 라디오(digital radio)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유레카 147로도 알려져 있는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시스템 따위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더 오래된, 광의

로서의 디지털 라디오는 통신 공학에서 마이크로파나 라디오 주파수 통신 표준과 같은 무선 디지털 전송 기술을 가리킨다. 또 다른 정의로는 디지털 신호 처리에 기반한 라디오 송수신기의 기능을 가리키지만 FM 라디오와 같은 아날로그 라디오 전송 표준의 송수신 기능도 제공할 수 있다. 즉 디지털 라디오의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다. 이는 하나의 만들어진 모델이 없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그 만큼 디지털 라디오는 강하고, 또 강하다는 뜻이다.

즉 라디오 영역의 디지털 방송이 '디지털 라디오 방송'이다. 디지털 라디오 방송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의 신호(음향)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전송하는 라디오 방송으로서 AM·FM에 이은 제3세대 라디오 방송이라 할 수 있으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광의의 개념을 함께 품고 있다.

여기에 라디오의 영역을 일정 정도 벗어난 새로운 개념이 합쳐져 그 개념은 더욱 정의를 가지게 되었다. 고품질의 음향,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우수한 이동수신 품질을 제공하기에 음악 방송, 교통정보, 뉴스 등의 전문방송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애초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라디오 방송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음성 외에도 영상, 문자 등의 전송이 가능하기에 DAB를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로 명명했다. 디지털 라디오 방송을 추진했는데, 개발하다보니 라디오의 특성을 넘어서는 멀티미디어 방송이라는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DMB는 2005년부터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물론 지상파냐, 아니면 다른 주체냐에 따라 현재로서는 DMB의 역사가 끝이 보이긴 하지만 말이다.

디지털 라디오는 이렇게 복잡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수성이 살아 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라디오의 매력 아닐까. 이 경이로운 매체는 지금까지 수 많은 역경을 딛고 버텨온 감수성의 역사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동시에 그 맥락은 폭발하는 장치적 수사에 힘입어 지금도 진화중이다. 당신이 라디오의 아날로그적 감수성에 심취해 있다면 디지털로 진화한 새로운 라디오의 변신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의 진정한 변형을 꿈꾸고 있다. 개념의 포괄성을 확보한 더욱 고차원적인 디지털 라디오의 진화를 기대해야 하는 이유다.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발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 터 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 독 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SONY
make.believe

Optical Disc Archive를 활용한 소형 콘텐츠 아카이브 라이브러리 **ODS-L10**



ODS-L10
Optical Disc Archive 10 slot library

ODS-L10 합리적인 비용으로 네트워크 기반 선반 아카이빙 구현

- 10장의 카트리지 및 2대의 드라이브(ODS-D55U) 내장 가능
- 내장된 Robotic arm으로 자동화된 아카이브 시스템 구현
- 아카이브/리트리브 파일을 관리하는 File Manager 어플리케이션 제공
- Web service API 기반으로 마들웨어 없이 기존 MAM 솔루션과 연동
- 빠른 파일 접근성으로 중형 용량의 콘텐츠에 더욱 신속하게 접근



※ 카트리지와 드라이브는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ODS-D55U
Optical Disc Archive Drive

Optical Disc Archive Cartridges

모 델	용 량	설 명
ODC-300R	300GB	SL Write Once
ODC-300RE		SL Re-Writable
ODC-600R	600GB	DL Write Once
ODC-600RE		DL Re-Writable
ODC-1200RE	1.2TB	TL Re-Writable
ODC-1500R	1.5TB	QL Write Once

Sony Korea Corp. Professional Solutions Division Company

■ 제품정보 : <http://bp.sony.co.kr> ■ 기술지원 : (국번없이)1588-7313 <http://bpeng.sony.co.kr>
 ■ 대리점 : 서울 • 인터아이코리아(주): (02)3471-1515 • (주)베스코에스아이: (02)716-9722 • (주)지엠에스: (02)2165-8777 • (주)캐스트정보: (02)3453-5148 • (주)한국에비스: (02)322-3264
 부산 • 인터아이코리아(주)부산지점: (051)518-4068 • (주)아이엠비테크: (051)257-7087 • 제니스디지털: (051)638-2210 / 대구 • (주)진영아이앤씨: (053)426-6900 / 광주 • (주)수창미디어: (062)654-2500 / 대전 • 인터아이코리아(주)대전지점: (042)862-4472
 ■ A/S센터 : • (주)참택엔지니어링: (02)784-9912 부산지사: (051)861-5886 • (주)시오인포: (02)786-0433 울산지점: (02)718-0434 • (주)나스텔: (02)780-3040 • 포털: (02)761-9577



Optical Disc Archive